

“성급” vs “참사”... 소득주도성장 공방

국회 결산심사 착수... 상임위 전체 회의 여야 설전 여 “경제 체질개선 시간 필요”...야 “장밋빛 환상만 좇아”

고용지표가 최악을 나타낸 이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는 모양새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21일 일제히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곳곳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여야는 맞붙었다.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됐으면서 경제라인 경질까지 주장한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실패로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정무부·외교통일부 등 11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이 최대 쟁점이 됐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불기는 오르고, 고용은 개선되지 않고 임금은 오르는 상황의 주범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이렇게 끌고 가선 안 된다. 추석 지나서도 불기가 잡히지 않으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 낙수효과는 완전히 실패해 저소득·저생산·저투자 등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했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악순환을 끊고자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했다”고 오히려 역공을 가했다.

예결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을 통해 34조원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며 “연이은 추경에도 일자리 참사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7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많이 줄어서 당혹감이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게 늘었는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무위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사안 질의와 별개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고용참사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일자리 정부를 칭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데 정

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들 간 신경전도 계속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압박에 “발목을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면서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게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용은 한가지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밋빛 환상만 좇는 정책으로 국민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부작용과 콘텐츠 부족에 뒷감당을 못 하고 허덕이는 모습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첫 약을 잘못 써서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다”며 “더 이상 국민들은 소득주도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송영무 “DMZ내 초소 10여개 철수”

국방위 전체회의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21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에 대해 “10여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GP는 남북이 서로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서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이고, 1km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할 것이다. 상호간에 GP 철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송 장관은 접경지역 지뢰제거와 관련,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 사용했던 지뢰제거 장비가 있었는데 노후화 돼서 사용할 수 없다”며 “ADD(국방과학연구원)에서 지뢰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청년일자리 세제혜택 29→34세 확대

정부는 21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혔다.

또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득이 월 3000~500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로 넘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윤소하 만장일치 선출

정의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윤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자 지난달 30일부터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임기는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5월까지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해남 출신으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과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당 윤소하(오른쪽)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동의시 국민연금 인상·지급보장 명문화”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정책과 관련,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를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한 뒤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인상을 건의해 왔다”며 “지급부터

공정회 안을 근간으로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국민이 낸 만큼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다만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 채무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기술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연건가는 고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마다 소득보장보다는 기금고갈에 초점을 맞춰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논의가 진행되니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장관은 “9월 말~10월 말까지 정부안이 갖춰지는 과정에 국회 복지위의

상하고, 최종 정부안이 복수 안이든 단수 안이든 만들어지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도 여론 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기금 수익률이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비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반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가위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굴복해야 하는 피해자를 법적 테두리나 사회적 인프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역할을 호소할 수 있느냐”며 “성범죄도 강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등까지 정부가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사회적·법적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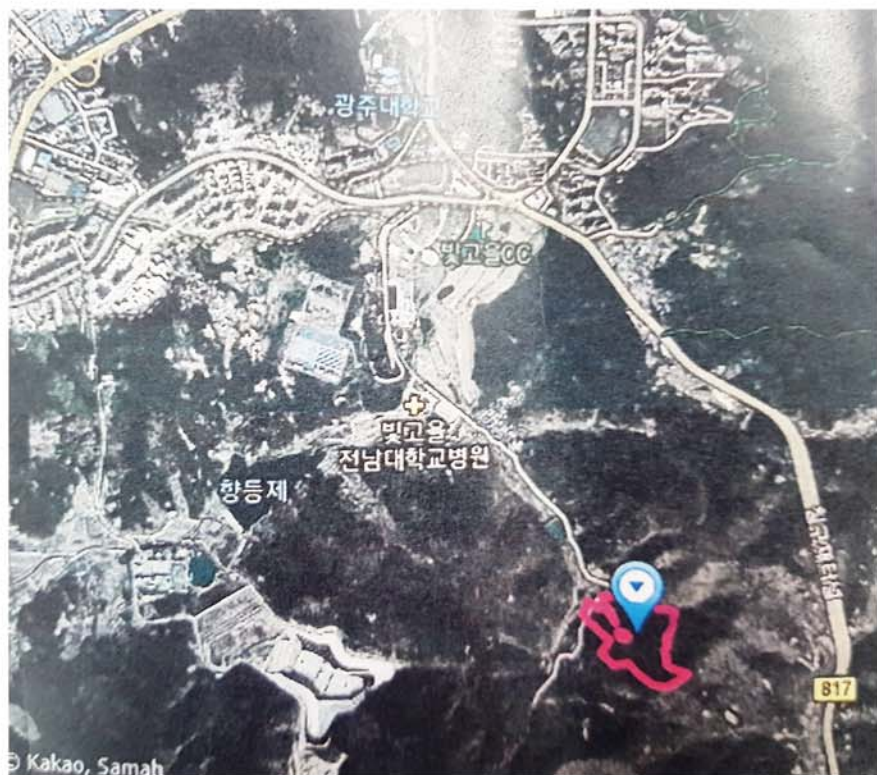
미가 과리가 크기 때문에 나왔고, 따라서 합리적 성관계에 대한 틀이 필요하다”며 “노 민스 노(No means no),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등 한 발 더 나아가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이번 재판부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변화된 성 인식을 쫓아가지 못한 판결이었다”며 “사법부 판단에 발미가 된 것은 입법 미비였고, 그 부분에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고 했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가위 차원에서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